

북한의 남북선박 충돌사건 해결에 대한 단상(斷想)

조 민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북한의 유화 제스처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7.11) 발생 한 달 만에 일어난 남북 선박 충돌사고(8.12) 해결과정에 나타난 북측의 태도는 주목을 요한다. 북한은 이번 사건 해결과정에서 대남 유화 제스처와 함께 정경분리 대응 방식을 보여주었다.

우선 대남 유화 제스처를 간과할 수 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은 북한의 의도적 또는 우발적 사건이든 간에 북측에 전혀 이로울 것 없는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북한 당국도 손익 타산의 측면에서 이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다. 금강산 사건은 남한 국민여론을 악화시켜 북측이 오래 동안 공들여온 대남 통일전선사업의 성과를 크게 허물어뜨리는 후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이미지가 훼손되었으며, 더욱이 관광 수입대금 차질도 빚었다. 북한은 남한 내부에서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이명박 정부의 탓으로 비판하는 분위기의 고조를 기대했으나, 금강산 사건은 오히려 남한 진보세력의 입지를 한층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때마침 금강산 관광지 인근 지역인 고성 항에서 발생한 남북 선박의 우발적 충돌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이미지 개선의 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대남 유화적 제스처로 다음 단계 우리 측의 반응을 기대하는 의도로 이해된다.

그와 함께 신속한 대응 방식이 돋보인다. 선박 충돌사건 해결과정에서 남북 간 관련합의서에 따라 조선진영무역회사는 ‘민간급 차원’에서의 해결을 강조하면서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남측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남북 해상당국을 채널로 하면서, 동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로부터 남측 동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에게 “모래운반선과 선원들을 곧 돌려보내는 동포애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통지”하는 방식을 택했다.

북한의 실리적 경험의지

북한은 모래채취 사업으로 매년 3,000 만 달러 정도의 수입을 획득하고 있다. 이는 금강산 관광 수입대금보다 많은 수입원으로 이러한 실리적인 협력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결과를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의 선박 충돌사건 해결과정에서 나타난 입장은 남북경협 분야의 훼손을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리적 측면의 대남사업의 지속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식 정경분리

북한의 이명박 대통령 비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 추구와 함께 남한 내 진보세력의 규합과 명분을 제공하기 위한 전술적 측면이 크다. 따라서 당분간 당국 간 대화는 회피하겠지만 민간부분의 남북경

협까지 경색되는 상황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대남정책은 당국 간 대화는 거부하면서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올 것이다. 이는 ‘관민분리’ 전략으로 당국과 민간 간의 이견과 갈등을 노정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말하자면 북한식 ‘정경분리’ 전략 위에서 한편으로는 실리추구와, 다른 한편으로는 관민분리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남남갈등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행태를 드러냈다. 이는 분명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의 한계 즉, 정책결정 메카니즘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보여준 사례였다. 그러한 사례의 축적은 북한체제의 원활한 작동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남북선박 충돌사건 해결과정에서 보여준 북한의 판단과 발빠른 대처는 남북관계 개선의 전망을 한층 밝게 하였다. 우리는 북한 당국의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우리 정부는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위해 북한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돕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